

## RECOGNITION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근골격계 산재 인정기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왼쪽 무릎이 말짱이다. 지난해부터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저릿한 통증이 온다.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 문제라고 생각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 '의료 쇼핑객'이 되어, 병원과 의사를 바꿔 가며 통증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달까지 다닌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로 인한 방사통일 수 있다고 했다. 허리 MRI를 찍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다. 그래도 낫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허리만 전문으로 보는 의사를 찾았다. 돌아온 답은 전혀 달랐다. “허리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편이네요.”

칭찬인지 위로인지 모를 말을 듣고, 더 해줄 치료가 없다는 소견과 함께 진료실을 나왔다. 통증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원인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전문의들조차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면, 그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얼마나 더 복잡할까.

### ● 산재 판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

산업재해 보상에서 직업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의학적 판단, 작업환경 조사, 전문가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질병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을 가장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이 역시 재해 노동자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핵심은 ‘심 의 제외’ 범위 확대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산재 심 의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근골격계 영역에서 ‘추정의 원칙’을 더 넓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등 5개 직종에서 발생하는 8대 근골격계 질환은 일부 재해조사 절차가 생략된다. 지난해 9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도 개정돼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일부 정신질환·직업성 암을 판정위원회 심 의 없이 신속 승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한다.

## ● 속도 와 공정성 사이

이번 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심 의 제외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적용 기준이 여전히 좁다고 본다. 경영계는 반대로 직종 확대가 산재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해당 논쟁을 조금 떨어져 살펴보면 다른 질문이 보인다. 지금 논의는 “어떤 직종을 목록에 넣느냐”에 집중돼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목록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다.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산업 구조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화가 늘고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면 직종 목록도 함께 업데이트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이 어느 순간 행정 편의를 위한 고정된 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목록에 없는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가. 입증 부담이 완화되는 직종이 있는 반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는 여전히 까다로운 기존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신뢰는 ‘목록 밖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 “구급차가 빨리 오는 것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낫다”

다시 나의 무릎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몸의 통증조차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수년간 반복된 노동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산재 제도에는 두 가지 질문이 따라다닌다.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속해야 하는가. 이번 고시 개정은 그 접점에서 도출된 하나의 답일 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남는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이다. 산재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이런 질환이 반복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산재 인정 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다. 🗨